

## 프랑스의 어문 정책

프랑스인들의 국어 사랑과 자랑은 예로부터 잘 알려진 사실이다. “제 나랏말을 꾀꾀이 지키는 일은 곧 옥에 갇혔으며 그 옥문의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고 설파한 것도 프랑스 작가 「도데」였다. 「이방인」으로 유명한 「까뮈」는 “나의 조국은 프랑스말이다”고 하였다. 또 “명확하지 않은 것은 프랑스말이 아니다”는 말이 프랑스인의 자존심처럼 예로부터 전해져 내려오고 있기도 하다.

프랑스인들의 이같은 국어에 대한 범국민적인 사랑은 특수한 경우에 치하게 되면 열정 내지 거의 광기(狂氣)로 변하기 쉬워서 때에 따라서는 도리어 그들 국어의 순조로운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때도 더러 있다. 벌써 수백년 전부터 계속 시도되어 오는 철자법 개혁이 단 한번도 성공하지 못한 것도 이런 사례(事例)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국민들의 국어에 대한 과도한 관심은 의견백출·백가쟁명을 불러 일으켜 개혁에 있어서의 통일성을 방해하였고 그들의 국어를 숭앙하는 정성은 그들로 하여금 역사·전통·과거에 집착하는 보수 정신에 사로잡히게 함으로써 개혁 그 자체마저도 반대하는 극단론자들을 양산(量産)하고 말았다. 이런 사태로 말미암아 불어는 철자법의 현실화에 실패함으로써 오늘날 영어와 더불어 인구어 중에서는 제일 보수적이고 비합리적인 철자법을 사용하는 나라로 전락(?)하고 만 것이다(반면, 포르투갈어·터키어·노어·노르웨이어·스페인어등은 정서법을 개혁하는데 성공하였었다.).

프랑스에서 언어 정책에 관여하는 기관은, 우리 나라의 경우처럼 당연한 당사(當事)기관이라고 볼 수 있는 문교부나 학술원을 제외하고도, 대통령 직속인 「불어사용권 최고자문회」(Haut Conseil de la Francophonie), 국

무총리 직속 기관으로 「최고불어위원회」(Haut Comité de la Langue Française) 등 최고 권위를 가진 상설 기구가 설치되어 있다. 이 밖에 불어와 불문화를 해외에 선전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쓰고 있는 「의무부 문화국」의 불어 정책 수립에 있어서의 영향력도 무시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상설 기구 이외에도 수시로 발생하는 문제 해결을 위해 국내 정책에 관해서는 문교부, 그리고 국의 정책에 관해서는 의무부가 구성하는 임시 기구가 수없이 회의를 거듭해 오고 있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어문 문제는 국회에서까지도 논의된다. 불어 사용에 있어서의 극도의 혼란상(표준어 문제), 국외에서의 불어의 위세 추락, 정서법 문제, 과도한 외래어의 침범 등에 관해 국민 각계 각층의 여론이 비등하자, 1980년 12월 국민의회(국회 하원)에서 마침내 3대 정당 발의로 30명으로 구성된 「불어 현황 조사위원회」(Commission d'Enquête sur la Langue française)를 만들기에 이르렀다는 것은 매우 인상적이다. 이듬해 5월에 있는 결과 보고와 건의 사항에 따라 정부는 과거의 불어 정책 상설 기구를 통폐합하여 위에서 말한 고급 기관을 만들고 불어 정책의 조정을 위해 따로 「해외문화교류 부처간 협의회」(Comité interministériel pour les Relations culturelles Extérieures)를 창설하기에 이른 것이다.

우리의 경우와는 달리 프랑스 정부의 제 1의 관심사는, 위의 여러 가지 상설 기구가 증명하고 있듯이, 국제어로서의 불어의 위치를 확보하기 위한 불어의 해외 보급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그들에게도 국어의 사용 과정에서 일어나는 갖가지 문제에 대한 고민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 중에서도 정서법 문제와 외래어 문제는 우리나라의 경우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서민들이 사용하던 라틴어의 구어체(라틴 속어)에서 발전해 온 불어는 초창기에 라틴어의 문어체에 물이 든 현학자들의 어원을 밝히고 싶은 집념으로 말미암아 현실적 발음과는 거리가 있는 철자를 갖게 되고 말았다. 게다가 26개의 자모밖에 갖지 않은 라틴어 문자 체계를 갖고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음소(현대 불어는 36가지 있음)체계를 가진 불어를 표음적 원칙에

입각해서 표기를 하다 보니 복잡하기 이룰데 없는 서기 체계를 이루고 만 것이다. 17세기에 창설되어 표준 불어의 사정과 표준어 사전의 편찬을 담당해 온 프랑스 학술원은 정서법의 분야에서도 오랫동안 유일한 권위 기관으로 자처해 왔었지만, 그 이름난 보수 정신과 권위 의식으로 말미암아 개관 발간 작업이 항상 너무 더더서 제 9 판은 21 세기에나 나오지 않을까 우려되는 터(제 8 판은 1935 년에 발간 되었음)인지라 현재 정서법의 기준으로 참조되는 사전은 일반 시중 출판사의 사전으로 대체되고 만 실정이다.

불어 철자법의 개혁 추진 운동은 16 세기부터 주로 민간 학자들의 주도로 끈질기게 계속되어 왔지만 그때마다 학술원의 반대로 늘 실패하였다. 20 세기에 들어왔어도 사태는 조금도 진전이 없다. 관의 주도하에 성안한 개혁안(문교부 : 1950 년과 1961 년)은 “정서법은 국가가 관여할 일이 못된다”고 주장하는 파들의 반대에 부딪혀 실패하였고, 민간 주도하에 이끌어낸 운동은 「법적 권위」의 결여로 번번이 주저앉고 말았다.

그러나 2 차대전 이후 노도처럼 밀어닥쳐 식자들을 우려케한 외래어(주로 영어 anglicisme)의 범람에 대하는 프랑스 관민의 태도는 결연하였다. 1975 년에 정부는 프랑스에 들어오는 모든 수입 상품에는 반드시 불어 표기가 되어있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을 법제화할 것을 결정한데 이어 1982 년에는 상원이 이 결정의 타당성을 재확인하였다. 듣건대 이 조치는 근년에 와서 더욱 강화되고 있는 모양이다. 또 정부는 모든 관공 문서에서 관용으로 고착되지 못한 외래어를 축출하도록 하는 한편 외래어에 대체될 수 있는 신어(예 : hardware, software → matériel, logiciel)를 마련하여 공표하기도 했다. 12 세기의 노르망디공(公)의 영국 정복 이후 영어로 흡수된 불어(외래어)단어가 약 5,000 어에 이르렀을 때도 아무도 영국이 타락했다고 한 적은 없었지만, 프랑스가 영·미국에서 수입한 단어가 약 3,000 에 불과한데도(최근 20 년 동안에는 약 300 어가 들어 왔음) 야단법석을 피우는 것은 세태의 변화 때문일까, 아니면 국민성의 탓일까? \*

박 옥줄(서울대 교수, 불어학)